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규제정치 비교 분석

: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ulatory Politics
using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 Focused on the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of Korea and Japan

양 승 일**
Yang, Seung-II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III.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비교 분석
- IV. 결론(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적용하여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규제도입기의 경우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 분단상황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발표됨으로써 수도권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기업가정치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방자치 축소, 지역불균형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기업가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강화기의

* 본 연구는 저자가 2011년에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에서 나오는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근거로 이론적 측면에서는 비교정책적 접근을 추가하였고, 사례적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사례인 수도권규제정책을 가미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규제정책을 비교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좀 더 분석의 타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15.1.28, 심사기간(1차, 2차): 2015.1.28~2015.4.9, 게재확정일: 2015.4.9

경우, 한국은 위성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수도권규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업가정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균형의 정체상태 등으로 인해 공장 등 제한법을 개정하여 규제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한국과 같은 기업가정치를 표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기의 경우 한국은 세계화추세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변동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결국 고객정치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일본은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신·증축허가조건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규제완화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는 고객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있어서 규제정치의 흐름은 시기별로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규제완화의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정치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치의 유형 중 기업가정치라는 것이다. 넷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강화기는 필연적으로 법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은 법률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의 추진배경은 외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수도권 규제정책 관련 권한이양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 주제어 :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수도권규제정책, 한국, 일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of Korea and Japan using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regulatory introduction period, Korea and Japan were derived entrepreneur politics. In other words, Japan and Korea showed a similar appearance.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are also based in Korea and Japan were entrepreneur politics. After all, it showed a similar appearance. And for deregulation period, Korea look to client politics. Japan lead to client politics that appear to look similar 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s shown by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low of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from time to time, it is likely a path dependence, entrepreneur politics, entrepreneur politics, leading to client politics. Second,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would seem a constant flow of regulatory introduction, regulatory strengthening, deregulation. Third, the beginning of the regulatory politics in the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is usually called entrepreneur

politics. Fourth, regulatory strengthening period will inevitably accompanied by a law. And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at it basically regulatory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by a law. Second, promotion background of deregulation is that it should primarily consider the internal conditions. Third, it should be handed over part of the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 Keywords : Modified Wilson's Regulatory Politics Theory, Capital Area Regulatory Policy, Korea, Japan

I. 서론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 중 규제정치는 불특정다수와 특정소수 등의 민간부문에 편익과 비용이 제공되고 부담하는 행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정책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정치의 사례로 수도권규제정책을 뽑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 규제정책은 정부의 수도권규제 또는 완화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펼쳐지는 편익·비용이 제공·부담되는 역동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수도권은 규제를 최소화하여 그들의 편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그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자신들에게는 상대적인 편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세계 도처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대상으로서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과 사례대상로서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선정하여, 수도권규제정책을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원형이론인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형으로, 규제정치 연구에 있어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일본과 비교분석하려는 것은 일본 역시 성장과정에서 수도권규제정책을 도입하여 역동성을 보였고,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정책을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을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시기별로 규제정치의 흐름 등이 나타나는데, 이를 한국의 사례만 가지고 조명한다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수도권규제정책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규제정치의 흐름 등 시사점의 일반화를 최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화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비교를 통해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도 조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적용하여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서 나타나는 규제정치의 흐름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규제정치는 규제와 규제완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규제정치의 유형은 규제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며,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은 규제완화에 맞춘 유형이다. 그리고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정치의 유형도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기는 분석의 집중도 등을 위해 이명박정부의 임기종료시점인 2013년 2월말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비교정책의 개념

비교정책(policy of comparison)은 사회과학에서 비교연구의 정의에 부합하면서도 연구대상이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교정치, 비교행정 등 다른 분야의 비교연구와 구분된다. 따라서, 비교정책은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비교 사회학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교정책은 비교정치의 투입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비교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측면인 관료제, 정책결정과정, 공공정책 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정책에 대한 여론의 피드백효과, 이익집단 간 경쟁에 대한 피드백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비교정책 연구의 초점은 정책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비교정치의 관심인 정치체제와 비교행정의 초점인 행정체제와 대조되는 것이다. 결국, 비교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

부 등 거시적 단위에서 채택한 정책의 실질적 내용, 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 정책채택의 배경과 효과 등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남궁근, 1999 ; Heidenheimer,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정책의 개념을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등이 채택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 시기별로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하여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규제정치의 개념

규제정치에 대해 합의된 개념정의는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규제정치를 규제와 정치로 대별하여 그 의미를 각각 살펴본 후 이를 근거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규제(regulation)에 대해 Mitnick(1980)은 사적목적이 아닌 공적목적에 따라 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감시하는 행동으로 정의했고, Meier(1985)는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행위를 통제하여 규제강화 또는 규제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았으며, 최병선(2000)은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의 질서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치(politics)에 대해, Lasswell(1951)은 희소가치를 가지고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의했고, Easton(1965)은 희소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분배방식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Heywood(2002)는 통치기술, 공적 업무, 타협과 합의, 권력과 자원배분 등으로 제시하였다.

전술한 2가지 개념을 근거로 규제정치의 개념을 조명해보면, 규제정치(regulatory politics)란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행위를 통제 또는 통제완화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인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소수 등에 편익·비용이 제공·부담되는 역동적인 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1) 개념

Wilson(1980)은 전술한 규제정치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규제정치이론을 제시했는데, 감지된 편익을 기준으로 넓게 분산과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을 기준으로 넓게 분산과 좁게 집중으로 조작화하여 대중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 이익집단정치로 유형화하는 이론을

나타낸 것이다.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었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 분산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고, 좁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정소수에게 편익이 집중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었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에게 비용이 분산적으로 부담되었다는 것이고, 좁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정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비용이 접근되었다는 것을 말한다(〈표 1〉 참조).

〈표 1〉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출처] Wilson(1980)을 근거로 재구성.

기본적으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으로서, 이에 대한 4가지 유형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규제정치의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으로서 그 유형은 대중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 이익집단정치로 대별할 수 있다(양승일, 2011 ; 최병선, 2000 ; Wilson, 1980).

(1) 대중정치

대중정치(majority politics)는 A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B 불특정다수에게도 비용이 분산적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정치는 해당 규제에 대한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쌍방 모두 불특정다수에 미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경우이다. 즉, 어느 누구도 특별히 큰 이익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쌍방 모두 체계적인 정치조직화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규제의 사례는 비교적 드물지만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그것이다.

(2)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entrepreneur politics)는 A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A 특정소수에는 비용이 집중적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치에서 비용을 높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 등은 잘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낮은 수준으로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규제는 환경오염규제 등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

(3) 고객정치

고객정치(client politics)는 A 특성소수에게 편익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A 불특정다수에는 비용이 분산적으로 부담되는 유형으로서 전술한 기업가정치와는 반대되는 행태이다. 고객정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대단히 빠르게 정치조직화하며 그러한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정치적 행동은 상대편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별 도전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수입규제 등이 그것이다.

(4) 이익집단정치

이익집단정치(interest-group politics)는 A 특성소수에게 편익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B 특정소수에도 비용이 집중적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대중정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정치에서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정치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갖고 있고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확보를 위해 서로가 참여하게 대립하는 경우이다. 본 유형에 속하는 규제의 사례는 많지 않으나 대표적 일례로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의 정부규제 등을 들 수 있다.

4.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1) 개념

전술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에 초점을 맞춰 대중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 그리고 이익집단정치로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본 이론이 규제완화정치의 유형까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근거로 규제

완화정치 유형까지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양승일, 2011 ; Wilson, 1980).

즉, 규제완화가 되면서 대중정치와 이익집단정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기업가정치는 고객정치로, 고객정치는 기업가정치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대중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A 불특정다수와 비용에 감지되는 B 불특정다수가 각각 B 불특정다수와 A 불특정다수로 변화하게 되며, 이익집단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A 특정소수와 비용에 감지되는 B 특정소수는 각각 B 특정소수와 A 특정소수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기업가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A 불특정다수와 비용에 감지되는 A 특정소수는 각각 A 특정소수와 A 불특정다수로 변화하게 되며, 고객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A 특정소수와 비용에 감지되는 A 불특정소수는 각각 A 불특정소수와 A 특정소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표 2〉 참조).

〈표 2〉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¹⁾

구 분		감지된 편익		감지된 비용		구 분	
		넓게 분산	좁게 집중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 지 된	넓 게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넓 게	감 지 된
	분 산	□ 편익 : A 불특정다수 □ 비용 : B 불특정다수	■ 편익 : A 특정소수 ■ 비용 : A 불특정다수	□ 편익 : B 불특정다수 □ 비용 : A 불특정다수	■ 편익 : A 불특정다수 ■ 비용 : A 특정소수		
비 용	좁 게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좁 게	편 익
	집 중	○ 편익 : A 불특정다수 ○ 비용 : A 특정소수	● 편익 : A 특정소수 ● 비용 : B 특정소수	○ 편익 : A 특정소수 ○ 비용 : A 불특정다수	● 편익 : B 특정소수 ● 비용 : A 특정소수		

[출처] Wilson(1980)을 근거로 전면 재구성.

2) 규제완화정치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정치의 유형을 근거로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데,

1) 좌측은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규제정치의 유형이고, 우측은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의미한다.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가 그것이다(양승일, 2011 ; 최병선, 2000 ; Wilson, 1980).

(1) 대중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대중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A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B 불특정다수에도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A 불특정다수에게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B 불특정다수에는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편익과 비용이 모두 불특정다수에게 낮은 수준으로 제공과 부담된다는 점에서,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대중정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다.

(2) 고객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기업가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A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A 특정소수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A 불특정다수에게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A 특정소수에는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됨에 따라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으로서 고객정치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환경오염규제완화 등이다.

(3) 기업가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고객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A 특정소수에게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A 불특정다수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A 특정소수에게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A 불특정다수에는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됨에 따라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으로서 기업가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유형은 전술한 고객정치와 반대되는 행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수입규제완화 등이 있다.

(4) 이익집단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이익집단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A 특정소수에게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B 특정소수에도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A 특정소수에게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B 특정소수에는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편익과 비용이 모두 특정 소수에게 높은 수준으로 제공과 부담이 된

다는 점에서, 규제정치 유형으로서 이익집단정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유형은 전술한 대중정치와 반대되는 행태가 된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의 정부규제완화 등이다.

5. 선행연구

먼저, 이론주제인 규제정치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분석한 국내연구 위주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영평·장미숙(2004)은 정부규제에 대한 NGO의 개입은 규제거버넌스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규제네트워크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규제정책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시민·정부·기업 등이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를 위한 책임 있고 자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정책네트워크로 규정하였다. 즉, NGO의 규제정책 참여를 Wilson의 4가지 정치상황의 유형에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NGO의 기여와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정책참여의 정도, 정책네트워크에서 NGO의 위상, 공공선의 추구, 정책성과에의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NGO의 정책참여는 각각의 규제정치 상황과 NGO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소수 조직화된 NGO의 정책참여 주도현상과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네트워크 개입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허훈·김종래(2008)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규제,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중복적이고 과잉적인 규제에 인하여 지난 수십년간 저개발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었다고 가정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규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경기북부의 규제는 일종의 정치·행정적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관련 집단 및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여 규제문제와 정치상황을 연계함으로써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현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활용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규제문제를 분석하였다.

정의철(2008)은 구글 등 인터넷 대기업이 중국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자체검열을 한 중국어판을 진출시킨 사례를 인터넷 규제이론과 연계해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현황 및 역사와 배경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미국에서의 인터넷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의 독점주의적 모델, 시장중심의 자유주의 모델, 그리고 공익중심의 참여적 공론장 모델을 중심으로 인터넷규제의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미국과 중국은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체제안정을 위해 인터넷 정보흐름을 규제하고 있었다. 특히, 독점적 규제모델을 따르는 중국의 경우 많은 정부기구와 인력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이며,

정교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문화·종교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었다. 미국은 정부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인터넷 정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한편, 시장중심의 자유주의모델과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포르노그래피 같은 상업적 정보에 대해서는 탈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규제조치 위헌으로 규정하는 등 공익보다는 시장과 기업활동의 자유가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인터넷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인터넷이 사이버상의 자치나 해방을 위한 장이 아니라 지배엘리트인 정치권력과 기업의 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희경(2009)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기구의 설계 및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크게 부각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의 규제기구를 대상으로 기구의 변화와 정치행위자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규제기구의 변화는 규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규제기구별로 나타나는 상이한 규제정치, 즉 기업가정치, 관료정치, 이익집단정치는 규제기구의 조직유형 및 규제역량, 규제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분석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규제기구의 설계 및 변화는 다른 정부기관들의 설계 및 변화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정부규제기구는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통령, 관료제, 국회, 이익집단 간의 균형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조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적용하여 규제상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규제정치의 유형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내용은 본 분야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규제완화로 까지 확장하면서 8가지 유형으로 접근하는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으로까지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사례에 적용시켜 비교 분석하는 틀은 전무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일정부분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차별성과 입체성 등을 보다 더 제고시키기 위해, 사례주제인 수도권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영구(2006)는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집중과 지배구조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수도권 규제완화론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펼쳐 전면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윤형호·김성준(2006)은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으로의 생

산요소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지역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규제 이후 비수도권으로 생산요소의 물리적인 이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으로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안혁근(2008)은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에 비추어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공장총량제는 정책목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볼 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수도권의 제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공장총량제 규제 후에도 약간 상승하였는데, 업종별 분석에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의 상승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장총량제는 의도한 정책목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은경(2009)은 수도권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한 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입지규제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억압은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포기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 축소, 성장잠재력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 지방, 국가경제 모두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완화하여 국가통합력을 제고시키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대도시권 정책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길준석(2010)은 글로벌경제하에서 40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경쟁시대에서 한국R&D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리하였다. 한편, 게임이론을 가지고 경제성장의 실질적 당사자인 정부와 시장이 수도권규제변화와 투자 사이에서 협조와 비협조의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검증해결대안인 보증제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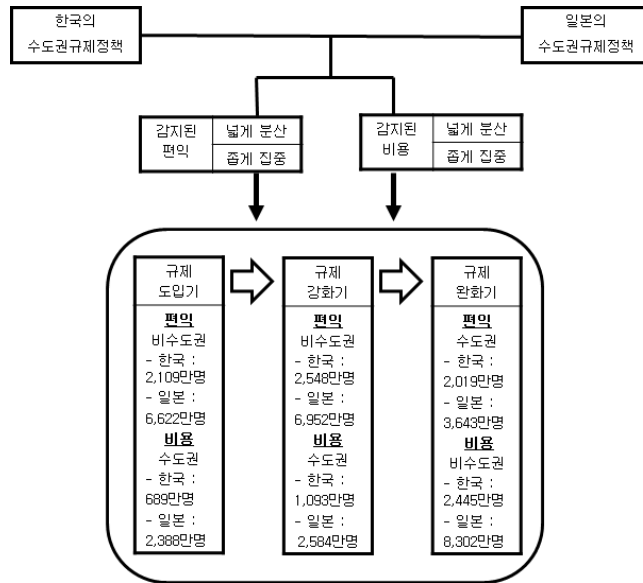
박상원·전명진(2011)은 수도권 공장입지규제가 수도권에 인접한 주변지역 제조업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주변지역 기업의 경우 수도권규제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주변지역인 충청도와 강원도 시군지역이 수도권규제로 인한 스펬오버효과(spillover effect : 특정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지역에게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참고로 하여 수도권규제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술한 선행연구는 수도권규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도권규제를 유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분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처럼 수도권규제정책을 한국과 일본으로 대별하여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으로 접근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일정부분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6. 연구의 분석틀

전술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분석틀을 구성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인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소수에 넓게 분산되거나 좁게 집중되는 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 즉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그리고 규제완화기에 각각 적용한 후, 양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편익과 비용의 형태 분석 등을 통해 규제정치 유형 또는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각각 도출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정치의 흐름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틀의 구성

[출처] 양승일(2011)을 근거로 재구성.

Ⅲ.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비교 분석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괄하는 11,745km²의 면적으로서, 전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중요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에 1960년대 높은 수준의 인구와 낮은 수준의 면적으로 인해 과밀화 등 급격한 도시문제, 남북대치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 등이 발생하여 수도권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그리고 규제완화의 흐름을 보이는데, 규제도입은 최초로 수도권규제를 규정했던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촉발기제가 되고, 규제강화는 기존 규제에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1977년 수도권 인구제 배치 기본계획이 그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규제완화는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에서 최초로 완화의 모습을 보이는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촉발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의 수도권은 1도 6현, 즉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등을 포괄하는 13,556km²의 면적으로서, 전 국토의 3.6%에 해당하는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에 1950년대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른 수도권의 기능강화정책에 따라 수도권인구의 급증, 시가지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불균형문제가 대두되자 수도권규제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역시, 수도권규제정책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그리고 규제완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규제도입은 최초로 수도권규제를 규정했던 1956년 수도권정비법 제정이 그 시작이 되고, 규제강화는 기존 규제에서 한층 강화된 행태를 나타내는 1962년 1차 증설면적 제한기준강화조치가 촉발기제가 된다. 그리고 규제완화는 규제일변도에서 최초로 완화의 행태를 나타내는 1983년 중소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신·증축허가조치가 그 시작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은 공통적으로 규제도입, 강화, 그리고 완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그리고 규제완화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08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 2012.10.11-30)). 아울러, 각 시기의 구분기준은 촉발기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촉발기제(triggering mechanisms)는 각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정책산출물로서, 이전 시기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다음 시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1. 규제도입기

1)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규제도입기에 있어서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의 촉발기제는 1964년에 발표된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대한 인구집중 방지를 위한 최초의 수도권규제 관련 행정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촉발기제의 동기는 산업화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인구집중으로 인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안보상의 취약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전술한 촉발기제를 시작으로 하여 1969년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이 발표되었고, 1970년에는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1972년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1973년 대도시인구분산책, 1975년 서울시인구소산계획 등을 발표하여 수도권규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기본적으로, 전술한 행정시책들은 비수도권에 공장건립 시 세금감면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시책에 해당된다.

결국, 규제도입기의 이러한 흐름은 편익이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으로 제공되고, 비용이 특정소수인 수도권으로 부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기업가정치의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객관성을 좀 더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가인터뷰를 활용한 양적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질적분석의 한계를 일정부분 보완하고자 했다. 즉, “규제도입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라는 질문에 평균값이 4.68로 나타나, 보통값 3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본 시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표 3〉 참조).

〈표 3〉 규제도입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정치 관련 전문가인터뷰 결과²⁾

규제도입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				
1	2	3	4	5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0명	0명	2명	4명	19명
N=25, Normal(보통값)=3, Mean(평균값)=4.68 , Median(중위값)=5, Mode(최빈값)=5				

2) 전문가인터뷰는 수도권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이상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다. 25명 중 전화인터뷰는 18명·대면인터뷰는 7명이고, 남자는 22명·여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여타사항은 본인들의 전반적인 희망으로 미공개 하고자한다. 그리고 본 사항은 이후 시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규제도입기에 있어서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촉발기제는 1956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을 처음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시킨 최초의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촉발기제의 동기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였고,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수도권기능을 강화하는 국토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지방자치 축소문제, 지역불균형의 문제 대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58년 수도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959년에는 수도권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이하 공장 등 제한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특히, 공장 등 제한법은 수도권 내 공장설립 등을 허가제로 도입하는 법률로서, 공장설립 제한기준을 1,600㎡로 제한하는 등의 강제규정을 담고 있다.

결국,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의 경우처럼 규제도입기의 흐름은 편익이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 제공되고, 비용이 수도권에 부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가정치의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도입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라는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평균값이 4.76으로 나타나, 보통값 3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본 시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라는 것에 역시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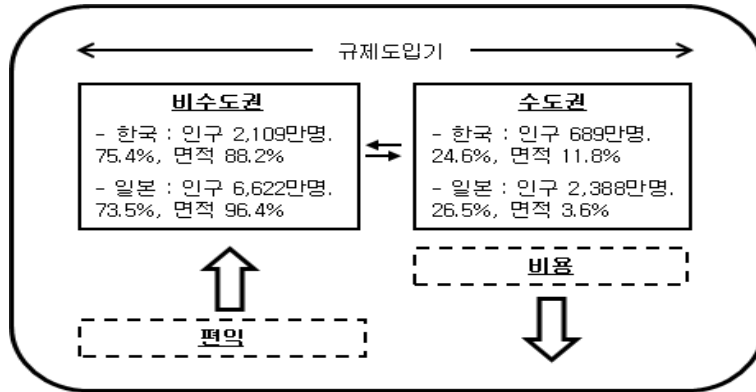
〈표 4〉 규제도입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정치 관련 전문가인터뷰 결과

규제도입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				
1	2	3	4	5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0명	0명	1명	4명	20명
N=25, Normal(보통값)=3, Mean(평균값)=4.76 , Median(중위값)=5, Mode(최빈값)=5				

3) 비교 분석

규제도입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수도권규제를 담은 행정시책 등으로 인해 전국 대비 인구 75.4%, 면적 88.2%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 편익이 제공되고, 인구 24.6%, 면적 11.8%인 특정소수의 수도권에 비용이 부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 역시 수도권규제를 담은 법률 등으로 인해 전국 대비 인구 73.5%, 면적 96.4%인 불특정다수의 비수도권으로 편익이 제공되고, 인구 26.5%, 면적 3.6%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소수의 수도권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규제도입기 편익과 비용의 행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규제도입기의 편익과 비용의 행태 분석³⁾

[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 검색일 : 2012.09.10-17)을 근거로 구성.

결국, 규제도입기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에서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고, 특정소수인 수도권에는 감지된 비용이 좁게 집중됨에 따라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중 기업가정치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5〉 참조).

〈표 5〉 규제도입기 한국과 일본의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분석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넓게 분산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 편익 : A 불특정다수 □ 비용 : B 불특정다수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 편익 : A 특정소수 ■ 비용 : A 불특정다수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 편익 : 비수도권 ○ 비용 : 수도권 →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 →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 편익 : A 특정소수 ● 비용 : B 특정소수

3) 인구와 면적의 수치는 촉발기제의 해당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는 이후 시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규제강화기

1)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규제강화기에 있어서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의 촉발기제는 1977년에 발표된 수도권 인구재 배치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까지의 유인시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인구수의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만들고, 최초로 수도권을 이전촉진·제한정비·시설유치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전체인구를 재배치 함에 따라 규제도입기보다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촉발기제의 동기는 이전 시기에서 적용한 행정시책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성남, 안양, 부천 등의 위성도시가 팽창하게 되고, 전국 대비 수도권인구 역시 24.6%에서 30.0%로 높아져 좀 더 강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촉발기제를 시작으로 1982년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을 발표하여, 수도권에 건축규제를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이전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강화된 규제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행정시책으로 일관하던 규제에서 보다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본 법률은 수도권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이 발표되는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환경보전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수도권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규제강화기의 이러한 흐름은 편익이 비수도권으로 제공되고, 비용이 수도권으로 부담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기업가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강화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라는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평균값이 4.84로 나타나, 보통값 3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본 시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표 6〉 참조).

〈표 6〉 규제강화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정치 관련 전문가인터뷰 결과

규제강화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				
1	2	3	4	5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0명	0명	1명	2명	22명
N=25, Normal(보통값)=3, Mean(평균값)=4.84 , Median(중위값)=5, Mode(최빈값)=5				

2)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규제강화기에 있어서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촉발기제는 1962년 공장등제한법의 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내 공장설립 제한기준을 기존 1,600m²에서 1,000m²로 강화 하여 이전 시기보다 수도권규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촉발 기제의 동기는 이전 시기의 규제 관련 법률 등으로 인해 수도권인구가 26.5%에서 27.1%로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경제상태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한 좀 더 강화된 정책 이 필요한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이를 시작으로 1972년에 공장 등 제한법을 다시 개정하여 공장설립 제한기준을 1,000 m²에서 500m²로 좀 더 강화하게 되고, 같은 해에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규제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즉, 본 법률은 수도권의 과밀공업지역에서 공장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촉진시키고, 본 지역에 활발한 공장 신·증설환경을 조성하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구속력을 갖춘 것으로서, 이전 시기에 부재했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의 경우처럼 규제강화기의 흐름은 편익이 비수도권에 제공되 고, 비용이 수도권에 부담되는 행태를 나타내는 기업가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강화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라는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평균값이 4.88로 나타나, 보통값 3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본 시기의 일본 수 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라는 것에 역시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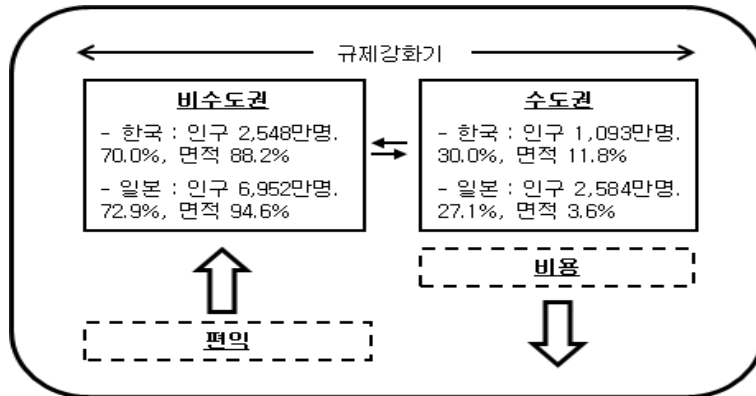
〈표 7〉 규제강화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정치 관련 전문가인터뷰 결과

규제강화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기업가정치인가?				
1	2	3	4	5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0명	0명	1명	1명	23명
N=25, Normal(보통값)=3, Mean(평균값)=4.88 , Median(중위값)=5, Mode(최빈값)=5				

3) 비교 분석

규제강화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행정시책뿐만 아니라 제도적 구속력을 갖춘 법률 등으로 인해 전국 대비 인구 70.0% 등으로 구성되어 있 는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 편익이 제공되고, 인구 30.0% 등인 특정소수의 수도권에 비용 이 부담되는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일본 역시 규제 관련 법률 등으로 인해 전국 대비 72.9% 등인 불특정다수의 비수도권으로 편익이 제공되고, 인구 27.1% 등으로 구성되어 있

는 특정소수의 수도권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규제강화기 편익과 비용의 행태는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규제강화기의 편익과 비용의 행태 분석

[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 검색일 : 2012.09.10-17)을 근거로 구성.

결국, 규제강화기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와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고, 특정소수인 수도권에는 감지된 비용이 좁게 집중되는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를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으로 조명해 보면 기업가정치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표 8〉 참조).

〈표 8〉 규제강화기 한국과 일본의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분석

구 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input type="checkbox"/> 편익 : A 불특정다수 <input type="checkbox"/> 비용 : B 불특정다수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익 : A 특정소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용 : A 불특정다수
	좁게 집중	기업가정치 (<u>entrepreneur politics</u>) <input type="checkbox"/> 편익 : 비수도권 <input type="checkbox"/> 비용 : 수도권 →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 →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익 : A 특정소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용 : B 특정소수

3. 규제완화기

1)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규제완화기에 있어서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의 촉발기제는 1994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는 수도권 권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지역의 규제가 아닌 차등규제를 지향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과밀부담금 부과로 전환하였는데, 수도권 도심재개발 건축물의 경우 과밀부담금을 50%로 감면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대학과 공장에 대해 총량규제를 도입하였다. 즉, 물리적 규제를 경제적·총량규제로 전환하여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도록 규제방식을 다양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1964년 수도권규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규제완화로 변동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촉발기제의 동기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추세가 수도권정책에서도 균형개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반의 구축을 강조하게 된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전술한 촉발기제를 시작으로 규제완화정책이 이어졌는데, 1997년에 법률 개정을 근거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이 마련되었고, 특히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내의 택지개발규모를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로 전환시키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이전 및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신설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이 마련되어, 수도권정책은 규제정책에서 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규제완화기의 이러한 흐름은 편익이 수도권으로 제공되고, 비용이 비수도권으로 부담되는 역전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고객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완화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고객정치인가?”라는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평균값이 4.56으로 나타나, 보통값 3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본 시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고객정치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표 9〉 참조).

〈표 9〉 규제완화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정치 관련 전문가인터뷰 결과

규제완화기의 한국 수도권규제정책은 고객정치인가?				
1	2	3	4	5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0명	0명	3명	5명	17명
N=25, Normal(보통값)=3, Mean(평균값)=4.56 , Median(중위값)=5, Mode(최빈값)=5				

2)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규제완화기에 있어서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촉발기제는 1983년에 발표된 중소기업 신·증축 허가조건 완화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신·증축을 허가하는 규제 완화로서, 1956년 수도권규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규제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촉발기제의 동기는 대규모의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1998년 부식물제조업과 도시락제조업 등을 제한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규제 업종 완화조치가 발표되고, 용기포장의 리사이클링을 허가기준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1999년 공장 등 제한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공장면적 제한기준을 규제강화기의 500㎡에서 1,500㎡로 크게 상향조정하게 된다. 일본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수도권규제의 근거가 되는 공장 등 제한법과 공장배치촉진법을 폐지한 것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법률의 폐지는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도권규제 폐지 등 전방위적 투자·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비수도권 등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잠재력 발굴, 특성화개발정책 추진, 광역경제권 단위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일본의 경우 역시 한국의 경우처럼 규제완화기의 흐름은 편익이 수도권에 제공되고, 비용이 비수도권에 부담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고객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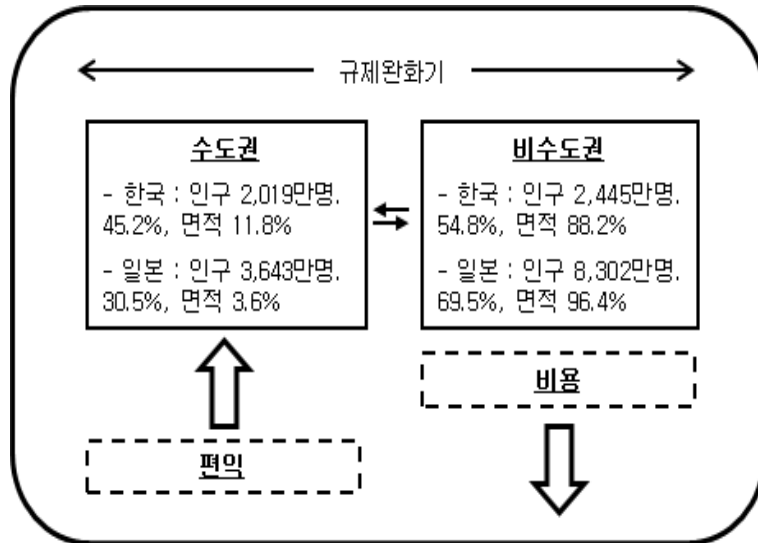
한편, “규제완화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고객정치인가?”라는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질문에 평균값이 4.72로 나타나, 보통값 3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본 시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고객정치라는 것에 역시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표 10〉 참조).

〈표 10〉 규제완화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정치 관련 전문가인터뷰 결과

규제완화기의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은 고객정치인가?				
1	2	3	4	5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0명	0명	1명	5명	19명
N=25, Normal(보통값)=3, Mean(평균값)=4.72 , Median(중위값)=5, Mode(최빈값)=5				

3) 비교 분석

규제완화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규제완화의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전국 대비 인구 45.2%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소수인 수도권에 편익이 제공되고, 인구 54.8% 등인 불특정다수의 비수도권에 비용이 부담되는 행태를 보였다. 한편, 일본 역시 규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의 폐지 등으로 인해 전국 대비 30.5% 등인 특정소수의 수도권으로 편익이 제공되고, 인구 69.5%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특정다수의 비수도권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모습을 나타내어, 한국과 일본의 규제완화기 편익과 비용의 행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규제완화기의 편익과 비용의 행태 분석

[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 검색일 : 2012.09.10-17)을 근거로 구성.

결국, 규제완화기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은 이전시기와 다르게 특정소수인 수도권에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고,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는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으로 조명해 보면 고객정치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표 11〉 참조).

<표 11> 규제완화기 한국과 일본의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분석

구 분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넓게 분산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input type="checkbox"/> 편익 : B 불특정다수 <input type="checkbox"/> 비용 : A 불특정다수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익 : A 불특정다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용 : A 특정소수
	좁게 집중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익 : 수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용 : 비수도권 →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 →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익 : B 특정소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용 : A 특정소수

4. 비교 분석의 종합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정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기의 경우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 분단상황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발표됨으로써 수도권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기업가정치가 도출되었다. 일본은 지방자치 축소, 지역불균형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기업가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강화기의 경우, 한국은 위성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수도권규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업가정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일본은 지역균형의 경제상태 등으로 인해 공장 등 제한법을 개정하여 규제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과 같은 기업가정치를 표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기의 경우 한국은 세계화추세 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규제에서 규제완화로 변동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결국 고객정치를 보이게 된다. 일본은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신·증축허가조건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규제완화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는 고객정치로 이어져 한국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표 12> 참조).

<표 12> 분석의 종합

구 분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규제완화기
동기	한국	수도권 과밀화, 분단상황	위성도시의 팽창	세계화 추세
	일본	지방자치 축소, 지역불균형	지역균형의 경제상태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촉발기제	한국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발표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발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일본	수도권정비법 제정	공장 등 제한법의 개정	중소기업 신·증축 허가조건 완화발표
편익	한국	비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일본	비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용	한국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일본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유형	한국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
	일본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

IV. 결론(시사점)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있어서 규제정치의 흐름은 시기별로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 고객정치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이 같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참고적으로 양승일(2011)의 연구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는 편익이 불특정다수에 제공되고, 비용이 특정소수에 부담되는 기업가정치의 유형을 보이지만, 세 번째 시기에서는 계속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특정소수의 반발 등으로 인해 편익이 특정소수에 제공되고, 비용이 불특정다수에게 부담되는 역전된 모습의 고객정치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도입, 규제강화, 규제완화의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한국과 일본 모두 수도권규제를 도입하였지만 그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어 규제 강도를 좀 더 강화하였지만, 규제강화로 인해 수도권의 역차별과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규제완화의 모습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역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제고에 일정부분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정치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치의 유형 중 기업가정치라는 것이다.

즉, 기업가정치는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 제공되고, 특정소수에게 비용이 부담되는 유형인데,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규제정책의 시작은 기업가정치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모두 정책적으로 양적인 규모가 큰 불특정다수인 비수도권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소수인 수도권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업가정치의 유형이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적 고려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수정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서 규제강화기는 필연적으로 법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법률은 행정시책 등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규제강화기에 있어서 한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강화시켰고, 일본 역시 공장배치촉진법을 제정하여 규제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높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수도권의 저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은 법률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은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이 높다는 점에서, 강제력 있는 법률을 활용하여 신속성 등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도입기부터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접근하여 효율성 등을 지향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이 아닌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등으로 수도권규제정책을 추진하여 혼란과 효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초래했던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의 추진배경은 외부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단위의 규제완화는 내부적인 역학구도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

여야만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정책성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정책의 규제완기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도시육성의 필요성 등에 따라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일정부분 효과를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히 세계화의 추세라는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아직도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규제도입과 규제강화에서 근본적인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우처럼, 내부적인 여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수준의 적절성, 개발속도의 역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수도권규제정책 관련 권한이양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거시적 조정작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각 실정에 맞고 경쟁력 있는 미시적 개발작업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한다면 수도권규제정책은 정당성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모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기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비수도권 등 개발 및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현실적이고 피부에 닿는 개발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일정부분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일본 관련 자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규제정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당사자 간 상호작용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역동성에 문제를 가져왔다. 아울러, 수도권규제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익과 비용의 정확한 계량화 역시 자료확보상의 한계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08). 「수도권규제 백서」.
- 김은경.(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혁 방안. 『제도와 경제』, 3(1) : 149-173.
- 김희경.(2009). 「정부규제기구 변화의 정치 : 정치행위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길준석.(2010). 지식기반(글로벌)경제 하의 수도권 규제변화 필요성. 『산업경제연구』, 23(6) : 3035-3056.
- 고영구.(2006).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반론. 『한국지역경제연구』, 8 : 53-68.
- 남궁근.(1999). 「비교정책연구 : 방법, 이론, 적용」. 법문사.
- 박상원·전명진.(2011). 수도권 공업입지규제가 주변지역 제조업 입지에 미친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5(3) : 365-381.
- 안혁근.(2008). 규제정책 효과 분석 :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2(3) : 55-78.
- 윤형호·김성준.(2006).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지역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4) : 277-294.
- 양승일.(2011).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정부학연구』, 17(1) : 109-143.
- 이삼주.(2004).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영향분석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3) : 401-418.
-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102.
- 전영평·장임숙.(2004).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 참여 : 기여와 한계. 『한국행정학보』, 38(3) : 281-300.
- 정의철.(2008). 인터넷 규제와 정치공론장 : 구글의 중국 진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9 : 209-245.
- 최병선.(2000). 「정부규제론」. 법문사.
- 허훈·김종래.(2008). 경기북부의 사회경제학적 위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략. 『한국정책연구』, 8(1) : 1-20.
- Easton, D.(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Heidenheimer, A. J.(1993). *Comparative Public Policy : The Politics of Social*

- Choice in Europe and America*. 3rd edi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 Heywood, A.(2002). *Politics*, Palgrave Publishers Ltd.
- Lasswell, H. D.(1951). *Politics : Who Gets What, When, How?*. The Free Press.
- Meier, K. J.(1985). *Regulation :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 St. Mar-tin's Press.
- Mitnick, B. M.(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Wilson, J. Q.(1980). *America Government : Institutions and Politics*. Lexington : D.C. Health and Co.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 2012.10.11-30>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 검색일 : 2012.10.17>

통계청<<http://kostat.go.kr>, 검색일 : 2012.09.10.-17>

양승일: 2006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규제정책의 변동 분석)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된 연구관심분야는 정책변동, 복지정책, 도시 및 지방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한국정책학회보), “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한국정책학회보), “장묘시설을 둘러싼 복지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한국행정학회보) 등이 있다(ysivd@cnsu.ac.kr; ysivd@korea.kr).

